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진단

민주노총 토론회 2022년 3월 30일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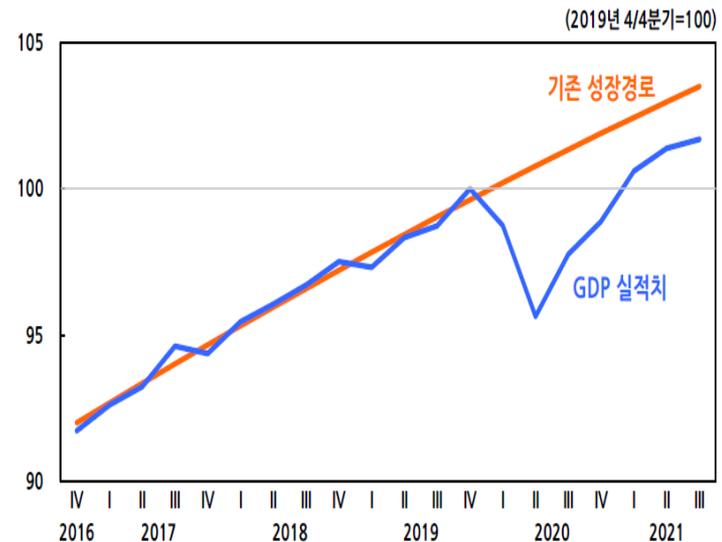
1. 현 경제 상황의 진단
2. 성장 담론 : '공정 혁신경제론'
3. 일자리 정책과 산업전환 정책
4. 규제 정책
5. 혁신관 비판
6.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
7. 금융 정책
8. 부동산 정책
9. 총평



1. 현 경제 상황의 진단

성장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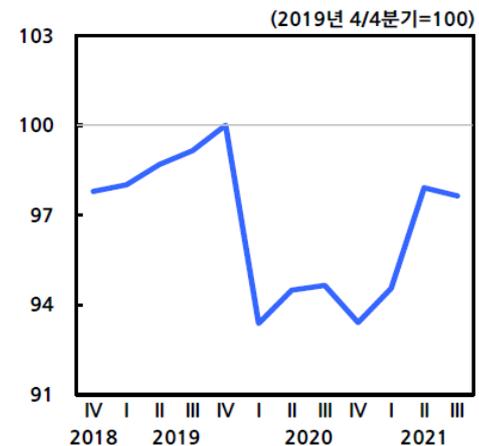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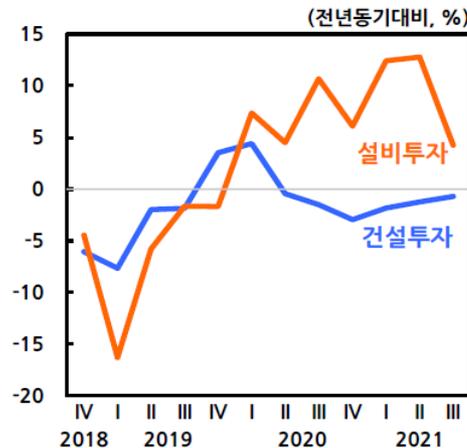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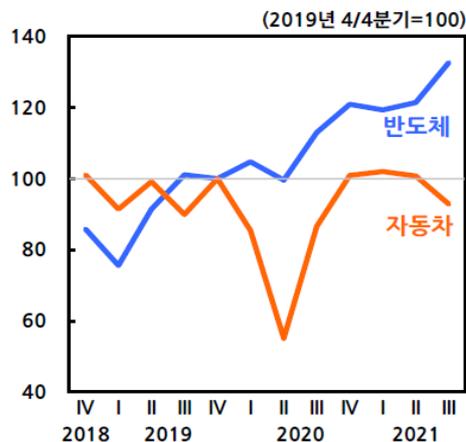
- 2021년 성장세는 반도체 업황 호전에 따른 수출과 투자가 견인. 특히 연간 6445억 달러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으로 세계 8위 무역 대국으로 도약.
- 그러나 2021년 3분기 이후 코로나 재확산, 세계경제 수요 정체, 장기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요인으로 인해 회복 속도 둔화.
- 백신과 치료제 보급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오미크론의 변이 출현으로 인해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 특히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위기 심화되는 상황 : 향후 경제회복의 폭과 속도, 위기의 전개 과정에 이들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주: 계절조정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KDI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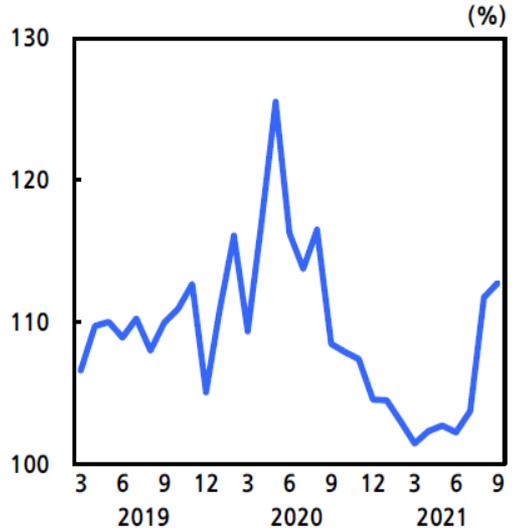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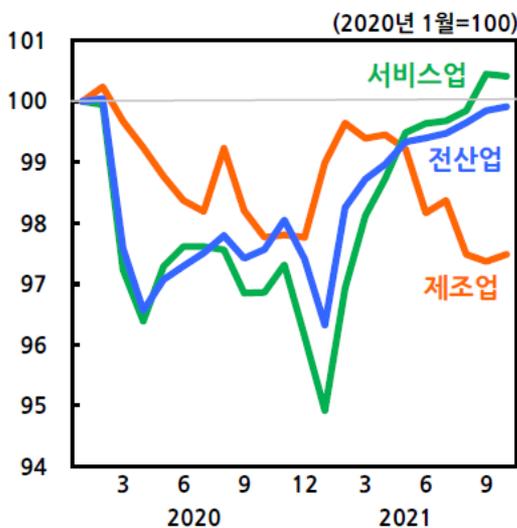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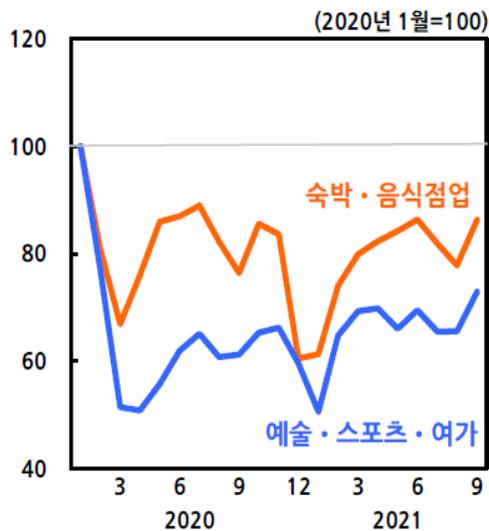
수요 부문별 추이

- 향후 반도체 세계경기 전개 양상과 서비스 수요 회복 정도가 관건.
- (수출) IT 비대면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 증가. 그러나 부품 수급 차질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은 위축. 2022년에는 반도체 업황 및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쳐 수출의 성장 기여는 제한될 전망.
- (투자) 그간에 회복세를 주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 설비투자가 생산 차질 등으로 최근 위축되는 상황이며 2022년에는 설비투자 대신 주택 부문 중심의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소비) 소비는 방역 상황에 따른 서비스 회복과 함께 완만히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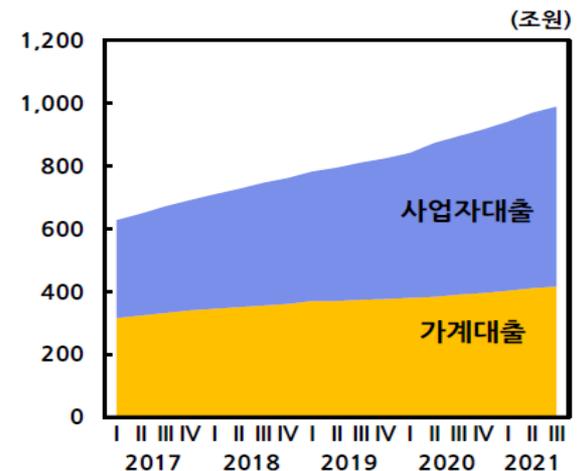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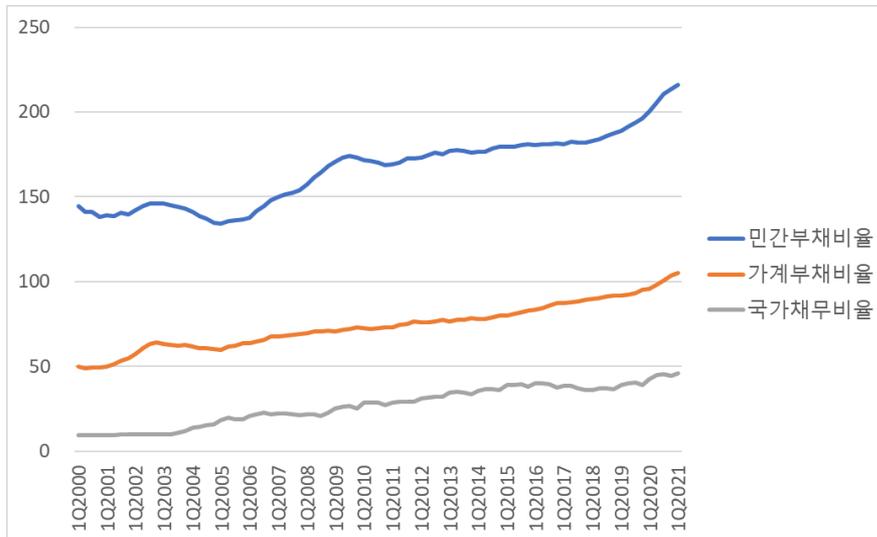
산업과 고용

- (서비스업) 주요 대면서비스업 생산은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까지 회복.
- (고용) 일자리는, 제조업 부진으로 인해 위축되는 가운데 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가 관건.
- (제조업)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로 출하 대비 재고 비율 상승하면서 부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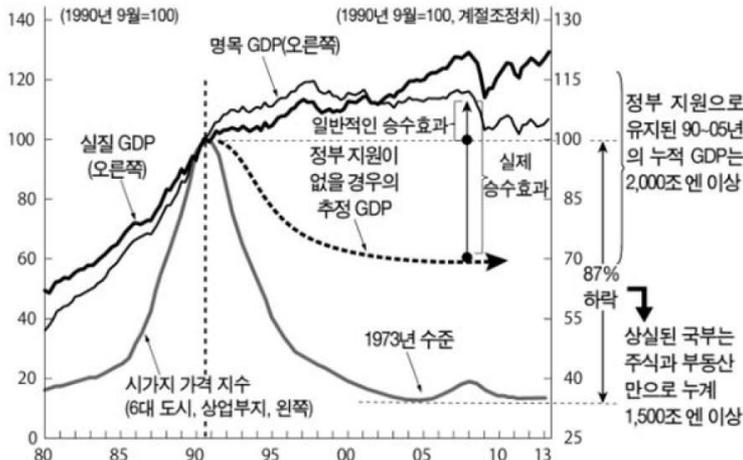
자영업 부채

-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계층별 부문별로 손실과 부채부담이 불균등하게 누적. 가계, 기업 모두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실화 위험 확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15%에 육박한 가운데 가계부채 1800조 시대.
- 비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증가가 두드러진 상황. 특히 최근 은행권 대출규제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카드)을 통한 고금리 대출 비중 증가. 신용위험 확대 우려 상존.



자영업 부채

- 민간의 과잉부채(debt overhang)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점증. 향후 민간부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임. 본격적으로 민간의 부채 상환이 개시되면 부채 최소화(debt minimization)를 위한 지출 억제로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sheet recession)'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그 경우 재정당국이 조급하게 건전화에 나서면 민간부채 해결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음. 정부가 재정적자 폭을 줄이거나 긴축 전환하면, 수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민간부문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후 적자재정으로 대차대조표 불황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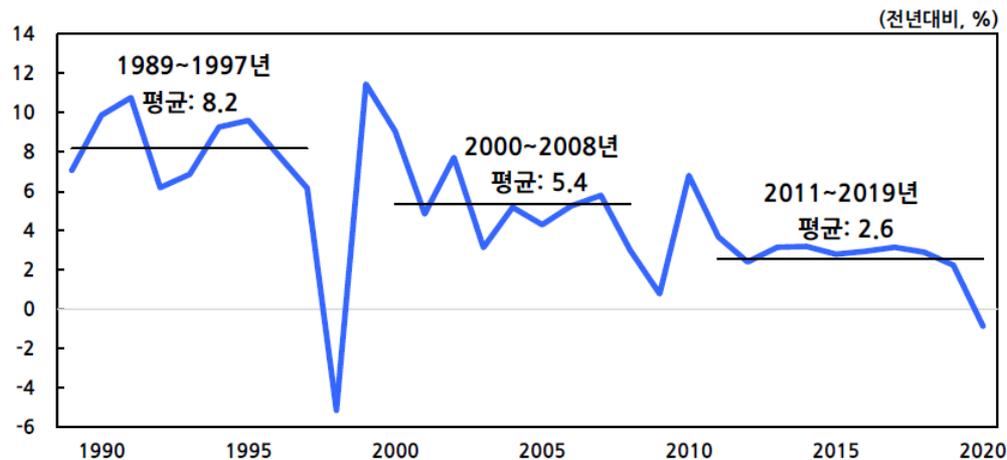
- 빚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한계가구와 취약부문부터, 국가채무는 가장 후순위가 되어야. 이를 위해 '코로나 국채' 발행으로 정부가 채무를 통합해 부담하고 코로나 피해 계층 손실액만큼의 부채탕감 등 국가적 대책을 기획할 필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변이 출현에 따른 방역 상황의 가변성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 중미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세계 각국의 긴축 움직임(출구전략),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신흥국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테이퍼 텐트럼 Taper tantrum = '긴축발작').
- 세계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만하게 회복되었던 그간의 과정은 향후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밀, 옥수수 등 곡물의 세계적인 공급 원천으로 이미 국제원자재 및 국제곡물 가격 큰 폭 급등. 이에 따라 기존의 글로벌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전망은 점차 최악의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전망으로 변경되는 양상.
- 특히 한국경제는 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희귀가스의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때문에도 추가 악재에 직면할 수 있음.
- 문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포용적인 회복 과정이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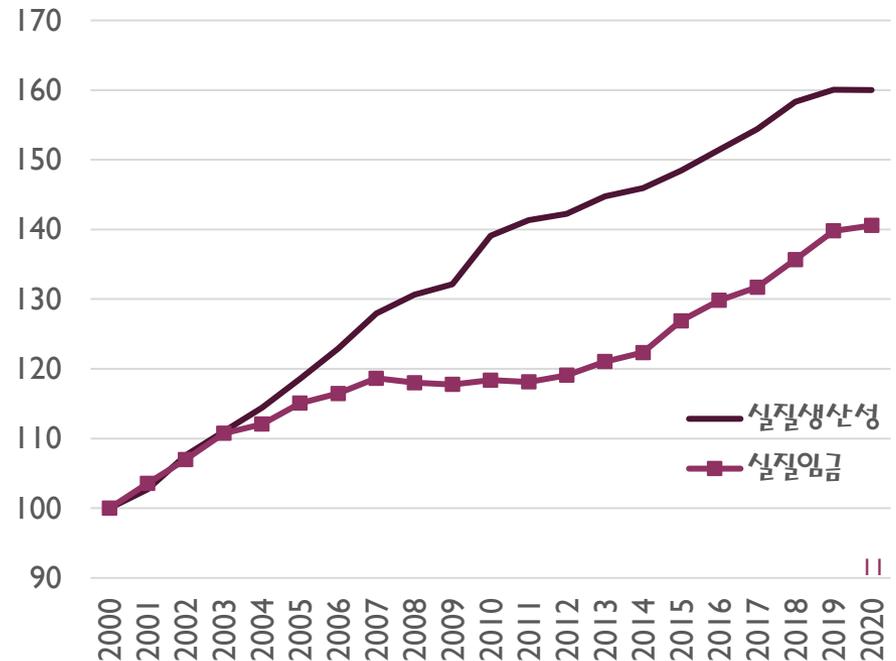
저성장 고착화 위험

-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장 경로의 하향 조정 : 이력효과.
-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성장 경로에 있어 변곡점을 맞게 될 가능성 :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 물가와 금융의 불안 요인은 관리하되, 확장적인 총수요 정책으로 유효수요를 보강하고 신산업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공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성장 경로를 전환하는 접근이 바람직한 상황.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

- 불평등과 양극화(특히 코로나 위기를 배경으로 한 'K 자형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국내외적 공감대.
- 거시적으로 한국경제는 경제규모 대비 자본량 과잉, 민간소비 과소. 과잉자본 유지를 위한 과잉저축으로 유효수요가 만성적으로 제약.
- 자본 과잉으로 자본수익률 저하
→ 부동산 투기와 같은 지대 추구 만연 →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 세계 최저 출산율과 '집단지살사회'. 15-64세 생산연령 인구 비율의 감소 전환으로 경제가 정체 국면 진입.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의 더한 층의 위축,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증가로 수요와 노동생산성 양 측면에 부정적 영향 예상.



산업전환기 산업정책 변화 요구

-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 역할 확대 :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명 지향적 공공투자("investor of first resort").
- 경제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총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적 고용 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의 요구 : 고용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소요,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나 석탄 화력발전 부문에서는 일자리 보호와 직무 전환, 재취업 등을 위한 지원이 당장 개시되어야 하는 실정.
-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간산업 국유화(공기업화 중심의 공적 소유지배구조로의 전환) 및 일자리국가책임 등 요구.



2. 윤석열 정부의 성장 담론 : '공정 혁신경제론'

'공정 혁신경제론'

- 윤석열 경제정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도전 과제로 ① 팬데믹, ②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 ③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제시. 저성과와 시장경제 위기가 당선자 인식 속의 중장기 과제.
-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를 무효화려는 보복적 시각 :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하고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 공정과 상식의 실종 사태.
-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론' = 저성과와 시장경제 위기라는 중장기 과제의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 나름의 성장 담론. 국가의 역할을 민간 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시장 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것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인식. 혁신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순간 민간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

낙수효과의 재림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낙수효과 재등장 : 성장을 통해 경제가 잘 되면 복지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 즉 기업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을 최대한 유연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의 결실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사회정책을 다시 조건부의 잔여적 성격으로 주저앉힐 수 있는 관점.
- 그러나 이미 1990년대부터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낙수효과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져 왔음. 검증되지 않는 시장만능 이데올로기. 규제 완화 일변도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IMF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조차 인정하는 추세.
- 국정 비전으로 잠재성장률 4% 달성을 제시. 이는 최근 한국은행 추정 잠재성장률 2%의 두 배.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하나의 수치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적 검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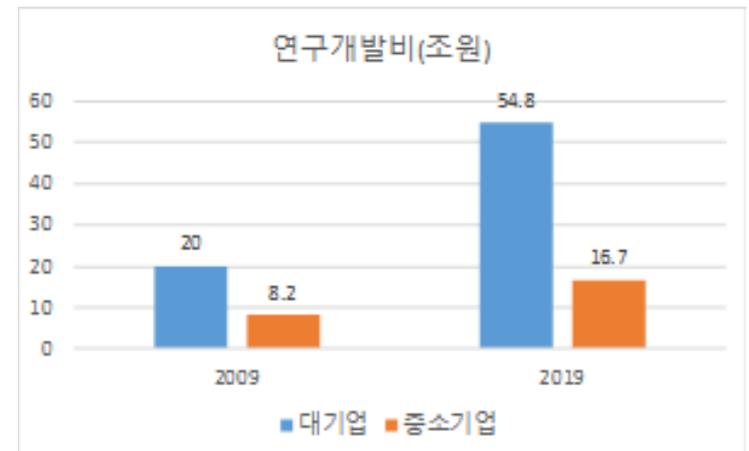


3.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산업전환 정책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

- 윤석열 당선자는 소득주도성장이 민간일자리를 파괴했다고 단정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 진보진영이 소득주도성장(이름이나 강조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과 같은 분배 중심의 대항적 성장 담론을 옹호할 필요성.
-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만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기업 성장을 우선 과제로 설정. 미래 인재상도 기업의 요구에 최적화된 기업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에 종속.
- 당선자 측에서는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지원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 그러나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역량이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현격히 미약한 현실에 대한 고려는 부족. 실제로는 세제 혜택의 투자 유발 효과 역시 제한적.

	법인 사업체수	고용인원	매출	영업이익
중소기업	99.1%	66.1%	37.3%	25.0%
중견기업	0.6%	13.9%	15.3%	17.7%
대기업	0.3%	20.0%	47.4%	57.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산업전환과 고용 대책

- 산업전환에 대비하는 고용 대책은 신산업 지원에 의한 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며, 2월 초까지는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고용 대책 자체가 공약에 아예 없었음. 2월 말 발표된 공약집에는 산업전환의 고용영향에 대해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별 지역별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인력 재배치 작업을 지원하는 등 노동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언급 포함.
-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일자리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구직자/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등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 사업이 있어 새롭지 않음.
-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 및 공동결정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 노동시간 단축 및 이에 연계된 소득보전 문제 등 노조의 핵심 요구가 걸린 사항들에 대해 여전히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산업전환은 일방적으로 기업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을 배제하면서 추진될 위험이 커 보임.

에너지 전환 : 2050 탄소중립

-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재설계하는 데에 있음. 원자력을 기저전원이자 탄소중립의 주요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두 줄 공약.
- 이를 위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아울러 안전성 평가를 거쳐 2030년 이전에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와 4호기, 한울 1,2호기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려 재가동할 계획. 현실적으로는 고리 2호기의 경우 법정 시한을 이미 경과해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나 밀어붙일 것으로 보임.
- 윤석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SMR을 중심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SMR이란 것이 기술 검증을 거친 것도 아니고 방사능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한계가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기 어려울 수 없음. 탈원전을 정치적 논리라고 비판하지만, 탈원전 백지화야말로 이익공동체화된 원전 산업계의 요구.

디지털 전환 : '역동적 혁신성장'

- 한국경제 성장의 키워드로 '역동적 혁신성장' 제시 : 저성장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필요성.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윤석열 경제정책이 강조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러나 이 역시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에 공통된 내용 있음.
- 창조경제 이래 '늘공'의 정책이 이어진다는 예측. 당선자가 제시한 6대 전략 사업 역시 대동소이함. ① AI 산업 육성, ②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③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④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⑤ 사이버 안전망 구축, ⑥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이 중 방점은 AI.
-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혁신의 씨앗 자체를 티우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시각.
- 당선자는 일찍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읽고 "이 책 덕분에 검찰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음 : 제어되지 않는 기업 활동과 재산권 행사 보장의 약속.



4. 윤석열 정부의 규제 정책

기업 성장 명분의 규제 완화

-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 규제 혁신 총괄기관을 설치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AI, 문화콘텐츠, 의료, 가상자산, 빅테크 등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탄생시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 약속.
-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에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커지는 점에서 부적절.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 방어는 무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서도 가능.
- 가업승계제도 완화 :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상속세율(최고세율 50%)을 인하. 그러나 상속세제 완화로 불평등 심화 가능성. 현행 제도 또한 승계 대상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이 광범위한 점 및 공제한도가 높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강화가 맞는 방향.

플랫폼 기업 정책

-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기업 정책 모토는 '공정과 상생이 확보되는 플랫폼경제' :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규제 도입 최소화 +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이해관계 충돌 조정. 그러나 이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때리기'는 없어야 한다는 기득권화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일 뿐임.
- 선거운동 기간에는 표심을 의식해 카카오나 우버 등 민간 택시 호출앱이나 빅테크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공공앱을 도입해 민간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으나 식언. 우선순위는 플랫폼 기업 보호 및 규제 최소화.
-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해 선발주자의 이점을 누리며 소비자가 일단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거기에 고착되는 사실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강화됨.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는 시장 권력을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집중시켜 지대 추구를 지원.



5. 윤석열 정부의 혁신관 비판

혁신은 집합적 과정

- 기술 변화와 생산조직의 변화가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에 핵심 원동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동의의 폭이 넓음. 문제는 혁신이라는 과정에 대해 경제학자도 정책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는 사실.
- 윤석열 경제정책은 정부가 기업들을 방해하지 않으면 기업들 스스로 혁신에 나서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 하지만 혁신에 대한 경제학의 잠정적인 연구 결론에 따르면 혁신은 특히 소유자 내지는 관련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와 노동자가 함께 기여하는 집합적인 과정.
- 특히 한국경제에서 기업들은 시장 조성, 기술 표준, 연구개발비 수혜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온 사실. 즉 혁신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의 투자 성과.
- 독점이윤의 기초가 되는 기술과 네트워크는 집합적으로 사회 전체에 의해 생산된 성격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음. 진보정치 사회화 강령의 물질적 토대.

혁신 성과의 분배와 가치의 착취

- 혁신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윤석열 경제정책은 혁신의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고 하겠음 : 실제로는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리고 공공부문을 확대해가야 함. 이를테면 경제학자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공공투자가 전체 투자의 3/4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음.
- 기업이 창출해낸 경제적 성과는 실제로는 기업을 둘러싼 생산적인 시스템의 결과. 그렇다면 혁신의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집합적 협상 = 사회적 교섭이 필요.
- 혁신을 떠받치는 집합적이고 누적적인 사회적 과정을 무시한 채 기업 위주 시각을 고수하면, 혁신의 결과물이 매우 기울어진 방식으로 분배되게끔 제도와 정책이 편향되기 마련. 이는 소수의 대기업이 혁신의 이름으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독점적으로 이득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움. 국가가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몬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기업 성과는 90% 정도가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 그렇다면 기업은 혁신의 일주체로서 10%의 성과만 가져가 고용된 노동자와 나누면 되고 90%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어 사회적 가치에 맞게 분배되어야 함.

혁신과 규제 : 정부의 역할

- 혁신의 위험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그 보상은 자본이 사유화한 결과가 곧 마리아나 마주카토가 말한 '가치의 착취'(=혁신 성과의 분배 결과로 기득권의 지대 추구 강화). 주류경제학의 혁신관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
- 정부는 혁신이 사회공공적인 가치에 복무하도록 방향을 유도하고 혁신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원칙을 고민해야 함. 하고 대자본의 가치 착취를 조장하면서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
-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대항력이 미약한 특정한 정치적 균형을 창출. 이 정치적 균형에서는 공공부문이나 노동자들의 가치 창조에 대한 기여는 부정되고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도 최소화. 오늘 한국경제가 그런 상태.
- 정부 규제는 이와 같은 기업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 시장은 국가에 의해 구성되고 관리되는 제도. 규제는 시장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시장 과정을 조절하려는 것. 보수 정부의 규제 완화는 규제의 이런 적극적인 측면을 부인하는 맹목적인 우파 경제학 이념에 근거.



6.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

손실 보상

-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의 길에서 최우선 과제로 공약집 첫 머리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 제시. 핵심 기조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공공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플랜'으로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한 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공약.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모순된 원칙도 함께 제시. 결국 50조 가운데 일부분은 대출 주선으로 무마될 가능성.
- 왜 50조 원인지 산정 근거는 없음. 재정자금을 50조 원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이 미루어지는 것인지, 손실 규모가 50조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불분명.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를 따질 기준도 밝히지 않았음.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반정부 흐름에 편승한 측면.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정책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원칙도 천명.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소극적 대책 이상 아님.

부실 채무 처리와 사후회복 방안

-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으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고 하나, 아직은 계획에 구체성이 없고 잠정적인 대안을 나열적으로 제시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정부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영업자 신용회복과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을 지원하는 공약도 있으나, 영세 자영업 부문이 외부 충격에 취약해 피해를 많이 입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막연히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 영세자영업 종사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음.



7.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

주식시장

- 주식시장과 관련된 윤석열 경제정책은 자본시장 선진화로 부자 국민 만들기로 요약됨.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 번째 공약은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강화이며 그 핵심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폐지.
-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한다면, 금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보는 현행 대주주 요건도 보다 낮추는 편이 바람직. 그런데 윤석열 경제정책은 거꾸로 아예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과세 형평성 원칙과 충돌.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백지화. 부자 감세.
- 금융소득과세를 개선하는 방향은 공제액을 5천만 원 밑으로 크게 줄이고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맞음. 그런데 윤석열 경제정책은 정반대. 불평등 시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
- 양도세 폐지는 재벌 승계 자금 마련에 악용될 소지. 금리 상승기에 금융자산가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세제 수단을 악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재벌 세습의 편의를 봐주는 정책.

가상자산시장

- 윤석열 경제정책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과세 시점도 2023년보다 늦출 예정.
- 발행 주체에 의한 사기와 부당이익 편취 가능성 때문에 금지되어온 국내 가상화폐 발행(ICO)도 허용할 예정.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
- 주식과 가상자산의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결정은, 종합과세 강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모든 재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옳은 방향이며 따라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불로소득을 노동소득보다 우대하는 편향성.



8.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총론

- 윤석열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은 임기 중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의 부담 경감. 즉 공급 확대와 규제 및 세제 완화 중심의 접근.
-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세제가 징벌적 과세였다는 인식, 대출 규제가 과도했다는 인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장을 무시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음. 그러나 현실은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바치는 무주택 세입자가 신농노계급(neo-serfs)으로까지 비유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지역 균형발전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진 함의가 상당히 큼. 그러나 적어도 공약집에 담긴 윤석열 부동산 정책만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슈에 대해 그 어떤 진지한 고려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오직 전 정권을 흠집 내려는 일념으로 대출수요자의 반발 심리에 편승해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고 무책임하게 평가하고, 수도권 부자 밀집 지역의 부동산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편들고 있어 우려됨.

부동산 세제

-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설 계획. 종부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를 합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 골자. 당선자 측에서는 세제 완화가 아니라 세제 정상화라고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조차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국제기준을 크게 하회한 점을 감안한다면 억지에 가까운 무논리.
-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도 인하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위한 것.
-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도 낮추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아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릴 계획. 매물 잠김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할 계획. 양도세의 경우 당장은 한시적 완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영구적으로 완화될 가능성.
- 요컨대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를 낮춘다는 것.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원칙도 외면. 세제 완화로 한동안 약보합세를 보여온 수도권 집값이 상승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나고 있음.
- 보유세는 불로소득 환수 장치. 기득권과의 충돌에서 밀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리고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유리함. 지금은 민주당도 세 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퇴행 중.

재건축 등 공급 확대

- 2022-2026년간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 공약 :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은 수도권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 취약계층에 국한한다는 원칙. 250만 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30-150만 호. 이 중 74만 호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해 공급.
- 윤석열 정부는 GTX를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활성화의 중추로 간주하고 3개 노선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을 단일 메가시티로 육성할 계획.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공약. 반면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제시된 바 없어 수도권 집중 가속화 예상.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47만 호를 공급. 그 중에 31만 호는 수도권. 재건축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은 대폭 완화할 방침. 분양가 규제도 완화. 지자체나 국가가 무상으로 받아가는 기부채납 비율도 낮출 계획.
- 강남권 외에도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부동산의 집값 상승을 도울 방안을 모색.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용도 변경과 종 상향으로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재초환 관련 특례도 제공할 계획.

대출 및 임대차 규제 완화

- 대출 규제도 완화. LTV 규제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상한을 70%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상한을 80%까지 올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모두에게 준다는 명분. 고비용 구조의 원천인 기존 자산기반복지 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은 포기하고 각자 부자가 되자는 환상과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
- 임대차 3법도 임대차 기간을 2+2년에서 2년으로 되돌려 계약갱신청구원을 무효화할 계획. 임차인 권리의 보호 관점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제 배제, 양도세 종과세 배제 등 혜택의 폭을 키울 계획. 임대사업자들의 갭 투자 증가로 가계부채비율 상승 위험 확대 예상.
- 지금도 등록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과도해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 형평 과세 원칙 위배.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반대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 부작용이 커질 전망.



9. 총평

역량과 준비 정도, 방향성

- 전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급변기에 전환기의 시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운영의 준비조차 덜 되어 보이는 극우 색채의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섬. 공약 자체도 준비가 미흡해 보이지만 당선자는 준비가 그보다도 덜 된 상태가 아닌지 의문.
- 경제정책 내용을 보면, 이대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될 만큼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확률이 매우 낮은 정책 패키지라고 평가할 수 있음.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당선자의 인식 미비는 특히 두드러짐. 이를테면 악화되는 불평등에 대해 성장의 결실로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음.
- 기득권의 시각, 대자본의 시각, 사용자의 시각이 뚜렷 극우적 이념 편향. 지난 정부를 축출하고 보복하겠다는 일념.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민중적 요구에 정권 초기부터 강대강 정면으로 맞설 것이 예상됨. 법치와 국가경쟁력의 명분으로 민주노조운동은 여러 방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

성장 전략의 모순

- 윤석열 집권으로 인해 한국 사회 성격이나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적 특질에 변화가 초래될 일은 없음.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신자유주의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요체제의 임금주도적 성격과 신자유주의 정책체제의 친자본 반노동적 분배정책 간 모순 역시 완화되지 않을 예상. 이에 따라 수출이나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성장전략의 한계가 뚜렷해질 전망.
- 최근 가계부채 폭증 및 글로벌 경제 혼란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성장전략으로는 경제성과를 관리하기 어려울 것임. 윤석열 정부는 수요체제와 정책체제 간 모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구조적인 불평등에도 둔감해 향후 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걷히고 세계경제 회복 전망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집권 기간 중 경제운영이 난맥상에 봉착할 가능성 상존.
-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으로 이명박 정부 기간처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불균형,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서민경제가 곤경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큼.

재정보수주의 강화

- 윤석열 경제정책은 재정건전성의 뒤편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공약집에 제시된 내용만 보면 재원조달방식은 결국 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경제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분을 활용한다는 정도의 내용. 분명히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것.
- 한국경제의 대전환기이자 경제위기의 한복판이면서 동시에 성장 경로의 변곡점에 위치한 오늘,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한국의 보수적인 시장만능주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만능주의에 빠졌다는 오진에 기초한 비난에 급급함. 국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결여.
- 공약에 따르면 향후 재정준칙은 현행 기재부 계획보다 더욱 엄격하게 정비되어 준수가 강제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실적으로는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그리고 공약에 따르면 자칭 재정전문가라는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주도하는 독립된 재정위원회 조직을 통해 재정이 운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음. 이 역시 두고 볼 일. 다만 지금은 적자재정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는 식의 선전포고가 이미 보수언론을 통해 표면화된 상황.

사회대개혁과 탈긴축의 기치

- 현재 위기적 경제상황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재정운영은 경제를 위축시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큼.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마자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재정준칙의 준수를 요구했던 선례가 있음. 그 결과,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회복은 더뎠고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음. 이번 코로나 위기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임.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보수 세력에 의해 비슷한 흐름이 재연되고 있음.
- 긴축은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정책 원칙이었음. 긴축의 일차적인 공격 방향은 대개 사회지출 삭감을 포함해 공적 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것이었음. 진보정치가 민중의 삶을 지켜내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유주의적 긴축의 논리를 극복해야 함.
- 지금은 재정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진보진영 내의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 민주노조운동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로의 전환에 공세적으로 맞서야 하며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사회대개혁과 함께 탈긴축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